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 상 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hansw@cdi.re.kr)

목 차

< 요약 >

- I. 시작하며
- II. 금강 살리기의 주요 내용 검토
- III. 금강 주변지역의 현황 및 여건
- IV. 연계발전 극대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발전전략

《요 약》

2008년 중앙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수상 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코자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은 본 궤도에 진입한 상태이며, 중앙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와 더불어 녹색뉴딜정책을 패키지화하여 범부처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중이다. 금강의 경우 금년 상반기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태하천정비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한다.

한편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은 주어진 기한 내에 끝내야한다는 사업의 완결성과 책임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에 있어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가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지의 주변지역과의 협의가 소홀하게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할 경우,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금강 살리기를 기폭제로 하여 그 파급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문화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권이라 하면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공간적인 범역을 일컫는데, 여기서 금강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일컫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금강의 역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인지권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강문화권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공간범역의 설정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충청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며 금강 주변지역간의 집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 형성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개발측면에 있어서 금강을 새로운 발전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가주도 사업은 단지형태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과 고차서비스업 등 도시적 차원의 서비스가 집적되어 주변지역의 상업적·경제적 기능을 위축시켰지만, 금강 살리기는 개발거점이 없는 선형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개발거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그만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강을 따르는 Blue-Network, 생태조성의 Green-Network 형성과 더불어 지역 발전축을 형성하여 새로운 균형 발전축 설정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충청남도 차원에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고 쏠림 현상이 없는 골고루 잘 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Blue-Network, Green-Network와 도시재생이 패키지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차적으로는 광역교통 및 지역 간 도로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거점 외의 소도시나 먼 중심지는 자족기능 보다는 기초생활권 확립차원에서 기존 중심지와 기능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관련주체간의 합의 또한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 즉,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금강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I. 시작하며

중앙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홍수피해의 규모 증가에 따른 사전예방 부족 및 과다 비용지출과 우리나라가 2011년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 아래, 홍수 및 가뭄의 근원적 방지,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극대화, 침체된 실물경기회복이라는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상 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중앙정부가 금강 살리기를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데에 반하여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것이 지자체의 과제이다. 소극적인 시각으로 볼 때 4대강 살리기는 국가하천에 대한 대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자체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가만히 사업진행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금강 살리기를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하여 그 파급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제일 관건인 바, 본 고에서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금강이 가장 많이 관통하는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Ⅱ. 금강 살리기의 주요내용 검토

1. 금강 살리기의 주요내용

금강 살리기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항구적 수해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하천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국토를 건설하고,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며,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 지향적 친수 공간 제공이다. 이를 위해 수상 레저, 문화 활동이 가능한 워터프론트를 복합개발하며,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문화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셋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에 의하면 19만 명의 고용창출과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선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재해예방 및 수자원 공급능력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제방 단면을 확대하고, 월류에도 안전한 수퍼제방 축조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토사 퇴적구간의 하도정비,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농업용저수지 정비가 이어진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기존의 치수 및 이수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친수 및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레저시설 등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고, 상습 침수지는 습지 등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수변구역에 생태벨트를 조성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개발로 연계발전측면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인근 관광거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수변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친환경 녹색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 1> 금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비고
친수 및 이수	제방보강	120km	4,124	국토부
	하도정비	4천만 m³	4,878	국토부, 지자체
	농업용저수지	24개소	8,358	농림부
	계		17,360	
친수 및 환경	하천환경정비	201.2km	6,201	국토부, 지자체, 민자
	자전거길	255km	185	국토부
	산책로 등		28	국토부
	계		6,414	
총계		23,774억원(국토 13,089, 농림 8,358, 기타 2,327)		

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계획 안내책자, 2009

2. 금강 살리기 주요내용 검토

1) 수자원 확보 측면

금강은 지질구조가 복잡하며, 험준한 산지가 발달해 있고, 이들 산지 사이로 감입곡류가 발달되어 있다. 금강의 중·하류에는 청주분지, 보은분지·대전분지 등의 내륙분지와 논산평야·미호평야 등의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많은 천변경작지들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금강은 홍수조절 능력 및 용수공급 능력은 타 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새만금 개발로 인한 용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하류의 지천 합류부근에서 토사퇴적으로 홍수 소통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

4대강 유역별 장래 용수부족량 전망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 금강은 타 강에 비하여 용수부족량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근본적인 취지와 부합하는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2> 4대강 유역별 장래 용수부족량 전망

(단위 : 백만 m^3)

구분 \ 년도	2001	2006	2011	2016	2020
한강	△12	△22	△769	△966	△1,191
낙동강	△65	△129	△748	△889	△1,000
금강	+146	+121	△104	△172	△186
영산강	△9	△72	△215	△241	△256
합계	+60	△82	△1,836	△2,268	△2,633

주 : 영산강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합한 수치임

자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006

2) 환경보전 측면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과제는 우선 이수 및 치수 위주의 하천 환경정비에 의한 부작용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하천환경 및 생태계 교란과 하천의 자정능력이 감소하고, 하천공간이 황폐화되었다. 또한, 하천부지 점용 증가, 골재채취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하천관리로 수변생태계가 파괴되고, 호안 콘크리트 공사 및 직강화 등으로 생태환경이 악화되었다. 또한 하천둑을 활용한 도로의 개발을 들 수 있다. 특히 갈수기에 하천 유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유지용수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및 고랭지 채소 재배 증가 등으로 하천의 오염부하가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수도 및 정수처리시설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증가하는 상황이며, 생활폐수 및 축산농가의 확대, 비료사용 증가 등으로 TN, T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더불어서 유해 오염물질 퇴적에 의한 수질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COD는 낙동강 및 금강수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BOD는 영산강 수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금강의 경우 금강 하구둑은 높은 BOD, COD수치를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수질악화를 위한 방지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갈수기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자원 추가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수변구역의 환경보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역의 토지이용 적합성 등을 고려한 수변구역의 오염관리 강화 및 식생대 조성과 하천주변에 녹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할 통한 녹색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표 3> 4대강 주요 지점별 수질 현황

구분	주요지점	COD (mg/l)	BOD (mg/l)	비고
한강	가양	5.2	3.0	
낙동강	구포	6.1	2.6	
금강	공주	6.6	2.6	
	부여	6.6	2.9	
	금강하구둑	8.8	3.9	
영산·섬진강	광주	5.1	3.7	
	나주	5.6	5.0	
	무안	5.1	1.8	

주 : 금강하구둑은 금강환경유역청 홈페이지 자료임(<http://gg.me.go.kr>)

자료 : 환경부, 2008 환경통계연감

3) 친수공간개발 측면

과거에는 하천과 도시간의 유기적인 연계보다는 수해방지 위주로 하천이 관리됨에 따라 친수성과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채 방치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 홍수나 재해발생시의 응급정비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미흡하였고, 하천제방을 자동차도로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과 하천을 차단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으며, 하천 둔치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하도정비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워터프론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환경문제와 상충될 수 있어서 그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대규모의 사업시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노정해야 했다.

금강 살리기에서 추구하는 친수공간 개발사업은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중교통수단 등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 배후지역과의 연속성 유지, 환경생태공간으로 자연성 회복, 수변경관의 개선, 스포츠·레저·쇼핑·주거 등 복합용도 개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금강 살리기의 주요사업과는 별개의 연계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한국형 녹색뉴딜사업과의 접목을 통해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 금강 살리기와 함께 추진해야할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Ⅲ. 금강 주변지역의 현황 및 여건

1. 금강 주변지역 현황

충청남도의 금강 주변지역은 상류부터 금산군, 연기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의 2시·5군이 속하며, 금강 주변지역은 금강변을 중심으로 분지와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금강유역의 지형은 대부분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이나 일부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금강 주변지역은 충청남도의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다원화가 미흡한 지역이고, 지경학적으로는 수도권과 원거리에 입지하여 수도권 규제에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부존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는 지역부존자원 활용의 규모화·네트워크화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금강주변지역의 낙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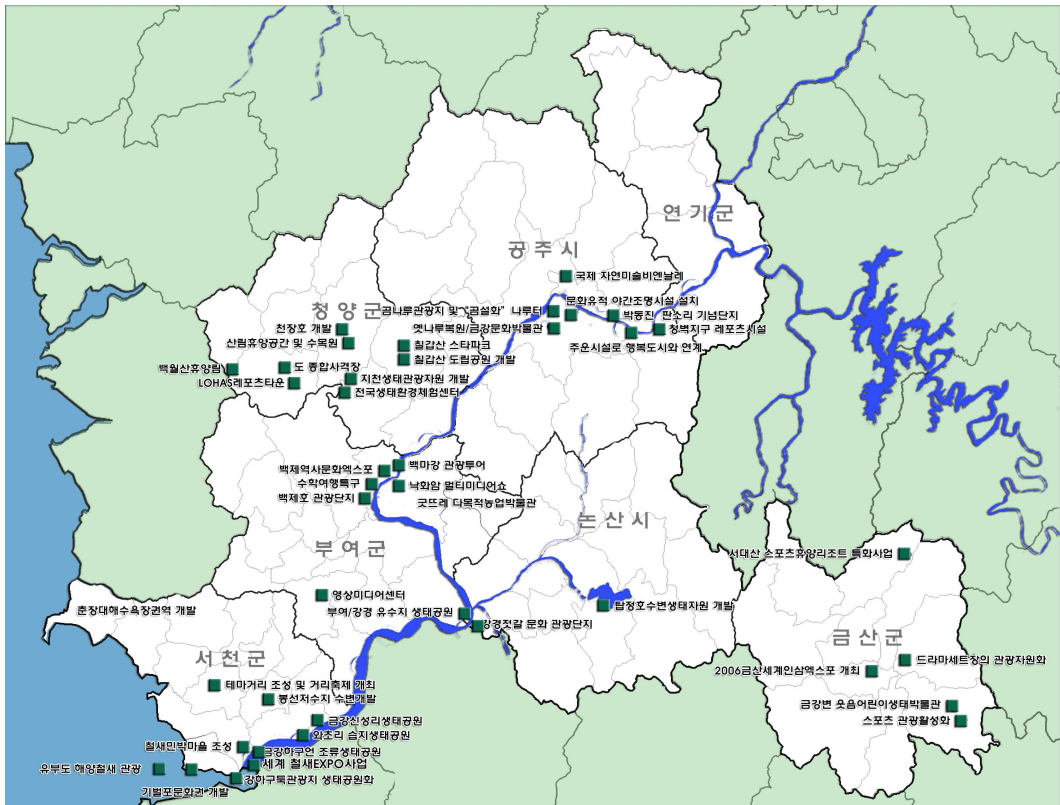
<표 4> 충청남도 금강주변지역의 낙후도

구분	지표	충남	금강 주변지역	비고
인구	연평균 인구변화율	0.62%	-1.30%	지속적 인구 감소지역
경제	소득세할 주민세	4,046억	1,090억	평균의 1/3수준
행·재정	재정력지수	0.376	0.206	열악한 재정
사회	노령화지수	13.51%	18.46%	초고령사회
산업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566천명(28.67%)	153천명(25.49%)	산업입지 부족
기반시설	도로율	0.79km/km ²	0.71km/km ²	낮은 기반시설

2. 금강주변지역의 부문별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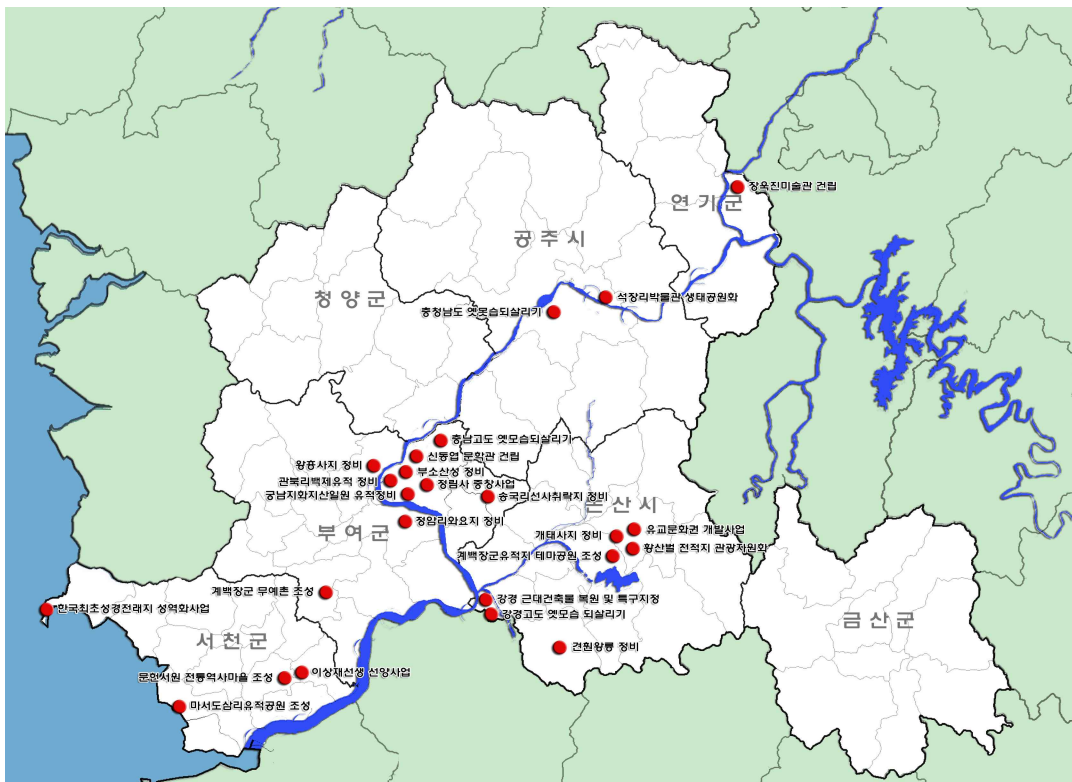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역사·문화·생태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이 조화된 지역으로서 백제역사재현단지, 공주문화관광단지, 대백제전, 신성리 생태공원, 금강하구연 조류생태공원 등이 분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람회 관련 사업이 공주·부여·서천에 분포하며, 생태공원조성사업, 산림박물관, 민물생태관조성사업, 국제 자연미술 비엔날레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그림 1> 관광부문 주요사업 분포도



역사·문화부문에 있어서는 선사시대부터 백제시대, 근대시대에 걸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기벌포문화권 등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기호유교문화자원과 강경의 근대건축물 등 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2> 역사문화부문 주요사업 분포도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근대기 이후 내륙부의 간선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하여 공주, 논산-부여, 서천으로 크게 구분되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금강을 따르는 주변지역 간에는 연계성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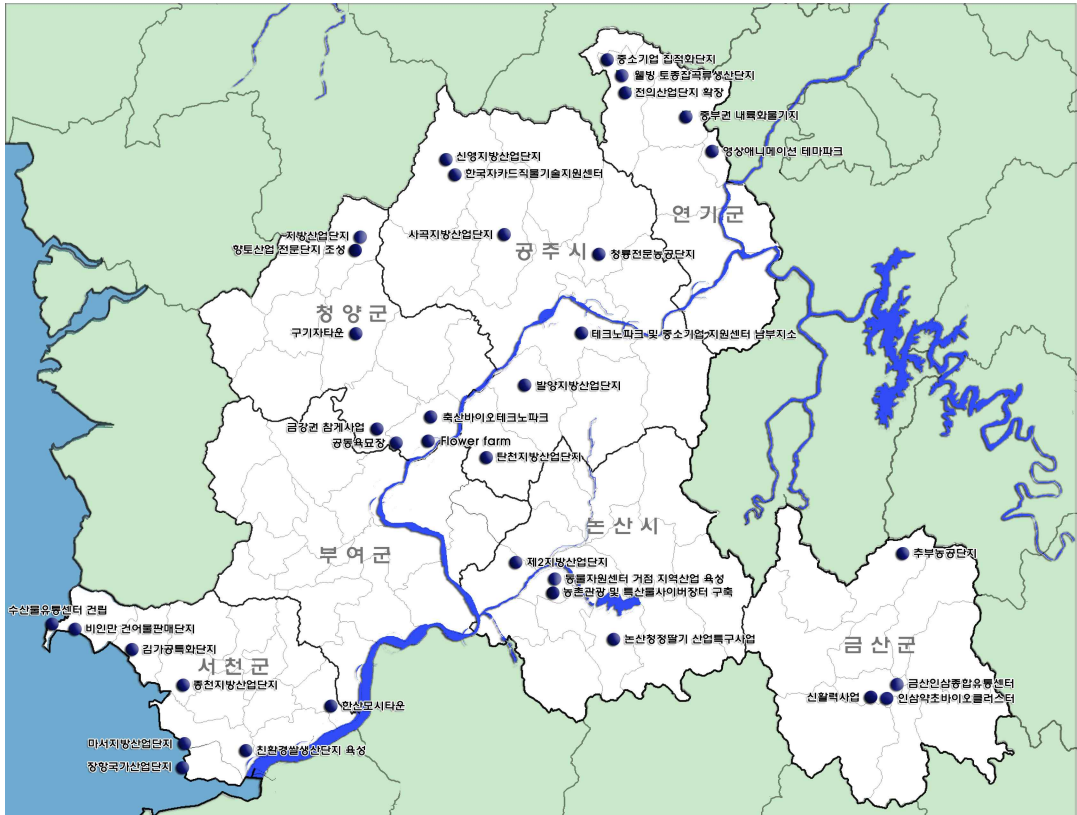
<그림 3> 도시 및 지역개발 부문 주요사업 분포도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서천의 강항내륙국가산업단지 조성 외에 대규모의 전략산업이 없이 작은 규모의 향토산업 위주로 육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규모화에 따른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하면, 금강 주변지역은 아직 개발의 처너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문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전제하였을 때 금강 주변지역의 잠재력은 풍부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림 4> 산업부문 주요사업 분포도



IV. 연계발전 극대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발전전략

1. 주요 과제

1) 수자원확보측면에서 장기적 대책 필요

금강 살리기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요약하면, 먼저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물 부족 예측에 대비한, 직접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댐·홍수조절지, 농업용저수지의 재개발이 필요하다. 금강 살리기의 사업내용상 현재 댐·홍수조절지의 사업이 없는 점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의 확충이 과제로 남는다.

2)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하구둑 개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수질개선측면에 있어서는 현 수질은 양호하지만, 10년 후를 대비한다면,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개선 사례와 같이 금강하구둑 개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수역 확보를 위한 지자체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친수공간개발을 위한 기존사업과의 융·복합화 노력 필요

친수공간 개발측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금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연계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바, 충청남도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기존사업과의 융·복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투자사업의 선정과 추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2. 발전전략

1) 금강문화권의 위상 정립

일반적으로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공간적인 범역을 일컫는데, 여기서 금강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금강의 역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인지권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강문화권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공간범역의 설정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충청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금강 주변지역간의 집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 형성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는 인문적 측면에 있어서 역사·문화적 기준으로 지역 및 지명의 유사성, 문화적 동질성 및 유사성, 동일 생활·교류인 지권으로 고려요소를 설정할 수가 있으며, 지역개발측면에 있어서는 연계개발의 효율성, 파급효과의 광역성, 재원조달의 가능성, 균형발전성으로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연계개발의 효율성은 역사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자원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높이며,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파급효과의 광역

성은 육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금강을 매개로한 관광 및 산업개발의 수요가 급증하는 곳을 개발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재원조달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체 비용의 회수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성은 충청남도의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 주변지역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정체성을 거양하고,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구현하여야 한다.

2) 금강을 새로운 발전축으로 전환

기존의 국가주도사업은 단지형태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과 고차 서비스업 등 도시적 차원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주변지역의 상업적 경제적 기능을 위축시켰다. 하지만, 금강 살리기는 개발거점이 없는 선형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개발거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그만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강을 따르는 Blue-Network, 생태조성의 Green-Network 형성과 더불어 새로운 균형발전축을 설정하여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금강 살리기의 기본 구상은 크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금강주변지역 중 금강이 관통하는 도시지역인 공주시 동부와 부여군 부여읍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백제전과의 사업 복합화 및 융합화가 필요하다. 강경은 도시적 면모를 갖추고 있고 소도읍 육성사업 및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수정·보완 및 소프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서천은 금강의 하류에 속하는 지역으로 신성리 생태공원을 비롯하여 금강하구둑 철새 탐조시설 등 생태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각 거점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강변의 관광지를 수정·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농촌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별단위의 특화된 소규모 거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각 도시와 도시, 소규모 농촌거점과 거점을 매개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경관축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른바 금강변 경관가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금강변을 따라 기존 도로 및 제방보강시 또는 새로운 자전거도로 개설시에 지역만의 특색있는 경관가로를 금강상류부터 하류까지 조성하고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쉼터 등을 매개함으로써 일관된 스토리가 있는 금강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3)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유도

충청남도 차원에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쏠림 현상이 없는 골고루 잘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Blue-Network, Green-Network와 도시재생이 패키지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차적으로는 광역교통 및 지역 간 도로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거점 외의 소도시나 면 중심지는 자족기능 보다는 기초생활권 확립차원에서 기존 중심지와 연계기능을 도모하여야 한다.

금강 주변지역에 접하는 읍면동으로는 총 3읍 22면 10동으로서 상류부터 금산군 제원면·부리면,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동부·우성면·이인면·탄천면, 청양군 목면·청남면, 부여군 부여읍·규암면·석성면·장암면·세도면, 임천면·양화면, 논산시 성동면·강경읍, 서천군 한산면·화양면·마서면·장항읍이다. 이중 지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공주시 동부와 부여군 부여읍, 논산시 강경읍, 서천의 장항뿐이다.

지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계획중인 사업 중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금강 살리기로 인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주 동부의 경우는 대백제전, 공주문화관광단지, 곰나루 유원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활용하여 거대 프로젝트를 계획하여야 하며, 더불어서 공산성 명소화, 금강 워터프론트 개발, 제민천 정비, 고마아트 센터 조성사업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여군 부여읍의 경우는 공주와 동시에 개최되는 대백제전을 비롯하여 백제호 관광지 조성사업, 왕홍사지 정비사업, 관광복합터미널 등을 계획토록 하여야 한다.

논산시 강경읍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강경의 젓갈을 활용하여 임이정·팔괘정을 비롯한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기존의 옥녀봉 정비사업, 황산고수부지 정비사업, 강경천 및 대흥천 정비사업을 수정·보완하여 강경읍의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서천군 장항읍의 경우는 현재 진행중인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과 관련하여 생태원, 자원관을 연계하기 위한 금강하구둑 관광지 및 금강 조류생태공원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성토록 하며, 각 사업을 Blue & Green Network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금강변의 주요 거점도시에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도시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기존 도시 외에 농촌지역으로서 면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주체계를 분석하여 자족기반을 정립하기 보다는 기존 도시와의 연계선상에서 정주환경을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산군의 제원면, 공주시의 장기면·반포면, 연기군의 조치원읍·동면·서면 일원은 대도시 근교형의 관광을 육성하여, 대전시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폭넓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주시 우성면·이인면·탄천면, 청양군 목면·청남면 일원은 백제문화권의 핵심지역인 공주와 부여를 매개하는 농촌지역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때 공주시 동부와 부여군 부여읍과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 지역은 백제큰길을 따라 금강 양안에 위치하는 개발의 처너지로서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이면서 온화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를 기반으로 유유자적하며 쉴 수 있는 개발형태 및 경관창출이 중요할 것이다.

부여군 석성면·장암면·세도면·임천면은 강경의 개발거점으로 하여 연계 가능한 농촌지역의 체험관광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지역은 하천변에 시설영농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 모든 시설영농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르는 지역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과 연계한 농촌관광과 생태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지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부여군 양화면과 서천군 한산면·화양면은 금강의 하류지역으로 금강의 맞은편에 전라북도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개발에 있어서 전라북도와는 차별화된 컨셉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지역은 농경지대로서 금강변에는 산지가 분포하고 있고 분지가 발달한 반면, 충청남도 지역은 넓은 농경지가 분포하여 생태적인 우월성 및 장점을 활용한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산면의 신성리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금강변을 따르는 생태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집적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4)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사업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관련주체간의 합의 또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역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금강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강을 안전하고 넉넉하며 깨끗한 생명이 숨 쉬는 문화와 휴식의 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남도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에서 서술한 추진전략에 맞추어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권오현,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배경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방향과 효과 세미나.
2. 김현주 외 2, 1999,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3. 이창희 외 12, 2004,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이창희 외 18, 200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한상욱, 2009,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추진방안”, 금강 살리기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6. 한국수자원공사,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7. 충청남도, 2006,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
8. 국토해양부, 2009,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계획 안내책자.
9. 기획재정부, 2009,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10. 환경부, 2008, 환경통계연감.
11.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12. 금강환경유역청 홈페이지, <http://gg.me.go.kr>
13. 한국수자원학회, <http://www.kwra.or.kr>

안 상 욱, hansw@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연구위원

Tel. 041-840-1163